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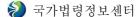
해양수산부(해양환경정책과), 044-200-5287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「해양환경관리법」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관리구역"이란 「해양환경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 및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(이하 "연안오염총량관리"라 한다) 실시해역으로서 관리해역과 관리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유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을 말하며, 해역별 관리구역은 별표 1과 같다.
- 2. "연안오염 총량관리 모델링"이란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관리해역 수질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오염원의 변화, 부하량의 증감, 관리유역 및 관리해역의 환경 변화 등을 비롯한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른 관리해역의 수질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유역 및 해역 환경자료"란 연안오염 총량관리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상, 수리·수문, 토양, 수질 등 관리유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관리해역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어나는 유출 및 반응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역 환경자료와 수질, 수저퇴적물, 수온, 염분, 조석, 해류, 먹이사슬, 물질반응 속도 등 관리해역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의 변화 경로 및 반응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해역 환경자료를 말한다.
- 4. "기준연도"란 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 또 는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유역 및 해역 환경, 오염원 등의 자료 및 통계 수집이 가능한 연도로서 주로 계획수립 착수 이전 년도를 말한다.
- 5. "목표연도"란 5년 단위의 연안오염 총량관리 계획기간(이하 "계획기간"이라 한다)의 최종연도를 말한다.
- 6. "안전율"이란 유역 및 해역 환경자료 조사, 오염원 및 처리효율 조사, 오염부하량 산정, 연안오염 총량관리 모델링 수행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비율을 말한다.
- 7. "오염원의 자연증감"이란 개발사업 이외에 오염원이 관리유역 및 관리해역 내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.
- 8. "오염원 그룹"이란 오염원을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한 것을 말한다.
- 9. "시행청"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주체로서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말한다.
- 10.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부하량의 종류와 뜻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"발생부하량"이란 배출경로가 분명한 점오염원 및 배출경로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 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.
 - 나. "배출부하량"이란 발생부하량이 처리과정을 거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하천이나 해역 등으로 배출하는 양을 말한다.
 - 다. "유달부하량"이란 관리유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중 유역의 자정작용 등을 거친 후 관리해역까지 도달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.
 - 라. "기존배출부하량"이란 기준연도에 관리구역에서 배출하는 배출부하량의 총량을 말한다.
 - 마. "기준배출부하량"이란 목표연도에 연안오염총량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을 사용하여 계산된 관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총량을 말한다.
 - 바. "안전부하량"이란 기준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하량을 말한다.
 - 사. "할당부하량"이란 기준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제외한 부하량을 말한다.
 - 아. "지역개발부하량"이란 시행청이 계획기간 동안 개발계획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.
 - 자. "자연증감부하량"이란 기존배출부하량이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따라 목표연도까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양을 말한다.
 - 차. "최종배출부하량"이란 기존배출부하량에 자연증감부하량, 지역개발부하량 및 기 계획된 삭감사업으로부터 삭감되는 부하량을 고려하여 목표연도에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부하량을 말한다.



- 카, "삭감부하럊"이라 시햇청이 계획기가 동안 삭감하여야 할 배출부하량을 말한다.
- 11. "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"(이하 "기술지침"이라 한다)이란 오염원 조사, 오염부하량 산정 및 예측,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 수행 및 부하량 할당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말한다.
- 12. "전문가협의회"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연안오염총량관리 항목 선정, 목표 설정, 오염부하량 산정 및 부 하량 할당 등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 분야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·운영하며, 해역별 전문가협의회는 별표 3과 같다.
- 13. "이행평가"란 영 제14조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- **제3조(적용범위)** ① 이 훈령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 중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해역의 관리구역에 적용한다.
 - ② 대상 오염원은 관리구역 내에 위치한 사업장 등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포함한 오염원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.
- 제4조(연안오염총량관리 항목의 선정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획기간 동안에 관리해역의 수질 및 저질(底質)에 대한 영향, 법적규제와의 연계성, 지표로서의 대표성, 감시측정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실시하는 해역의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를 거쳐 연안오염총량관리 항목(이하 "관리대상 오염물질"이라 한다)을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② 해역별 계획기간별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.
- **제5조(관리목표의 설정)**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에 따른 목표(이하 "관리목표"라 한다)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.
 - 1. 관리해역의 해양환경기준
 - 2. 관리구역의 오염원 분포
 - 3. 관리해역의 수질 및 퇴적물 등의 오염 현황
 - 4. 관리해역의 지형 및 해수순화 특성
 - 5. 공공처리시설의 방류구 위치 및 영향
 - 6. 관리목표 달성의 기술적 가능성
 - 7. 지방자치단체(이하 "지자체"라 한다)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후 20년 이내에 달성해야 할 최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계획기간별 단기목표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술지 침에 따라 조사한 관리해역의 과거 5년 이상 기간의 해양 환경조사 자료 및 연안오염총량관리 모델링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③ 관리해역의 수질 또는 저질(底質)이 불균일한 분포를 보이는 경우 시행의 타당성,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균일한 수질 또는 저질(底質) 분포를 보이는 구간별로 관리목표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.
 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목표를 설정할 때에 전문가협의회와 주요 이해관계자 및 시행청과 논의하여야 한다.
- **제6조(수질 및 저질(底質) 측정 및 자료분석)**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, 관리해역의 환경 변화를 관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질 또는 저질(底質) 측정 및 평가 방법을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기술지침으로 정한다.
 - 1. 수질 또는 저질(底質) 측정 지점
 - 2. 수질 또는 저질(底質) 측정 항목
 - 3. 수질 또는 저질(底質) 측정 시기 및 빈도
 - 4. 측정 자료의 평가방법
 - 5. 자료 보고 및 관리체계
 - 6.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과의 연계

제2장 현황조사

- 제7조(관리구역 구분)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할당의 기본단위가 되는 관리구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·설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.
 - 1. 관리유역의 자연적인 배수 특성
 - 2. 하수처리구역과 하수처리분구

- 3. 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의 방류구 위치
- 4. 관리해역의 수리·수문학적 특성
- 5. 관리해역의 이용현황
- 6. 그 밖에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
- 제8조(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) ① 시 ·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준연도의 토지 및 해역 이용현황, 토지 및 해역 이용 규제 실태에 관한 사항(면적 및 도면), 환경관련 토지 및 해역 규제에 관한 사항(면적 및 도면)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·지구·구역 등의 지정현황과 토지 및 해역 이용·규제에 영향을 주는 계 획기간 동안 확정된 개발계획을 조사하여야 한다. 이때 시·도지사는 관할이 아닌 관리해역의 이용 및 규제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양식,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.
- 제9조(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) ① 시·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기상, 수리·수문, 토양, 수질 등의 유역환경자료와 수질, 수저퇴적물, 수온, 염분, 조석, 해류 등의 해역환경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영향을 주는 계획기간 동안 확정된 개발계획과 그 밖에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 링에 고려하여야 할 자연적인 변화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사양식,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오염원 조사 등) ①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오염원 분류에 따라 관리구역의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를 시행한 후 오염원 증가에 대한 예측을 할 때에는 최소한 과거 5 년 이상 기간의 오염원 변화 추이와 계획기간 동안 확정된 개발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오염원 조사 시 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, 조사방법 및 오염원의 예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.
 - ④ 시행청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기준연도가 상이하면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시행계획 수 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1. 제8조에 따른 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
 - 2. 제9조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
 - 3.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사 등
 - ⑤ 제9조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조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의 사용으로 추가 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.
 -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·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.
 - 1. 제8조에 따른 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
 - 2. 제9조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
 - 3. 제1항·제2항·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등

제3장 부하량 산정 및 관리

- 제11조(오염부하량의 산정) ① 시·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염부하량(발생부하량, 배출부하량 및 유달부하량을 모두 포함한다)을 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실제 배출량에 관한 조사가 어려울 경우 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,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관리기준 등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.
 - ② 시·도지사 및 시행청은 부하량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 증빙자료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에 필요한 원단위, 처리효율 및 추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.
- 제12조(기준배출부하량의 산정) 시·도지사는 기준배출부하량을 산정함에 있어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3 / 7 -

- 1. 목표 달성을 위한 처리기술의 가용성
- 2. 처리기술 적용의 경제성을 고려한 우선순위

- 3. 시행청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
- 제13조(안전부하량의 산정) ① 시·도지사는 안전부하량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곱하여 산 정한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안전율 산정의 근거자료를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1할 이하의 안전율을 정할 수 있다.
- **제14조(할당부하량의 산정 및 배분)** ① 시행청이 지역개발 등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할당부하량은 기준배출부하 량에서 안전부하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관리구역 내 시행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당부하량을 배분할 수 있다.
 - 1. 기존 오염원 특성 및 부하량
 - 2. 관리해역 수질 또는 저질(底質)에 미치는 영향
 - 3. 부하량 삭감계획 및 삭감수단의 가용성
 - 4. 지역개발 압력
 - 5. 재정 및 투자 여건
- **제15조(지역개발부하량의 산정)** ① 지역개발부하량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. 이 경우 계획기간 중에 대단위 공유수면매립 등 개발로 인하여 추가적인 오염원 유입뿐만 아니라 기준배출부하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준배출부하량 감소분은 개발부하량으로, 증가분은 삭감부하량으로 본다.
 - 1. 지역개발부하량 = 할당부하량 기존오염원 최종부하량(기준연도 오염원이 삭감계획에 의하여 시행계획 종료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) 자연증감부하량
 - ② 지역개발부하량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합을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소수둘째자리, 총인은 소수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. 또한 각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이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0.05kg/일 미만인 경우는 "0"으로 산정하여 배출부하량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되 전문가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.
 - ③ 시행청은 다음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.
 -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
 - 2.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(집단화된 농어촌 주택,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)
 - 3. 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,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
 - 4. 제1호,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사업으로서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(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0조, 제21조,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재협의, 변경협의를 포함한다)
 - 5. 영 제61조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사업
 - 6. 기타 관리구역으로 관리대상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
- **제16조(개발사업의 부하량 할당 및 관리)** ① 시행청은 제15조제3항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.
 - ② 시행청은 계획기간 종료 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단계 기본계획 승인 전까지 현 단계의 지역개발부하량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. 다만, 지역개발부하량이 없거나 소진한 시행청은 안전부하량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·도지사에게 할당을 요청할 수 있고, 시·도지사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.
 - ③ 시행청은 제1항에 따라 할당된 개발사업의 준공을 분기별로 확인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총량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 - ④ 시행청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를 제31조의 이행평가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.
 - ⑤ 시행청은 개별 개발사업에 따른 배출부하량 변동 및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, 할당부하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분기별로 제2조제12호의 전문가협의회의 확인을 거쳐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⑥ 시행청은 지역개발부하량을 모두 소진한 경우 공공목적의 긴급한 개발사업(철도건설, 도로건설 등)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에 상응하는 오염물질 삭감계획의 수립·시행으로 부하량을 할당받을 수 있다.
 - ⑦ 관리구역 내에서 법 제84조 및 영 제61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시 연안오염총량관리 목표 및 기본계획의 부합 여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⑧ 시행청은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확대된 경우 증가된 지역개발

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퍼센트 미만 확대된 경우에는 지역개발부하 량을 추가 할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4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

- 제17조(기본계획의 수립주체) 시·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18조(기본계획의 내용)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5와 같다.
- 제19조(기본계획의 승인) ① 시·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별표 6의 증빙자료를 전산화일 형태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거절하거나 자료의 보완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20조(기본계획의 변경승인)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1. 관리구역의 변경
 - 2.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변경
 - 3. 할당부하량의 변경

제5장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

- 제21조(시행계획의 수립주체) ① 시행청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시행청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구역 내 관할 소유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③ 소유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이 2개 이상 시행청의 관합권에 포함되는 경우 관계 시행청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 여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제22조(시행계획의 내용)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7과 같다.
- **제23조(시행계획의 승인)** ① 시행청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시행청이 시·도지사일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별표 8의 증빙자료를 전 산화일 형태로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행청이 시·도지사일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.
 - ③ 시·도지사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청이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거절하거나 자료의 보완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24조(시행계획의 변경승인) 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1. 할당대상자(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자에 한정한다)별 할당부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 - 2. 할당된 배출부하량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
제6장 이행평가

- **제25조(이행평가 구분)** ① 시행청은 제2조제13호에 따른 이행평가를 기본이행평가와 종합이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이행평가는 전년도의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며, 종합이행평가는 계획기간의 마지막 년도에 실시하는 것을 워칙으로 한다.
- 제26조(이행평가 대상기간) 제25조에 따른 이행평가의 평가대상 기간을 기본이행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로 하고, 종합이행평가는 해당 차수별 계획기간 전체로 한다.
- 제27조(기본이행평가) 기본이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.
 - 1. 관리해역의 관리목표 대비 현재 상태의 비교

- 2. 시행계획에 반영된 유입하천 오염도 조사 결과
- 3.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배출·삭감시설의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
- 4. 시행계획에 포함된 삭감시설의 설치·운영 여부
- 5. 총량관리대장의 부하량 증감자료 비교를 통한 할당부하량의 초과여부
- 6. 관리목표의 초과 또는 연차별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과 잠정적인 조치사항
- 제28조(종합이행평가) ① 종합이행평가는 제27조의 기본이행평가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.
 - 1. 시행계획 전망자료 대비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의 증감 내역과 그 원인 분석
 - 2.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차이가 있는 경우 원인 파악
 - 3. 시행계획에 반영된 삭감계획의 삭감주체·목표·방법, 시설규모 및 예산, 삭감 이행 시기별 실적평가
 - 4. 총량관리대장에 기재된 오염부하량에 대한 적정 산정여부 평가
 - ② 종합이행평가 시 총량관리대장에 기재된 오염부하량이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산정한 오염부하량과 차이
 - 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총량관리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29조(부하량 할당시설의 평가) ① 시행청은 이행평가를 위해 부하량을 할당받은 오염물질 배출·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할당량 준수 여부를 별표 9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 - ② 오염물질 배출·삭감시설별 이행 모니터링은 별표 10에 따라 실시한다.
 - ③ 시료의 채취·운반·보존·분석방법은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.
 - ④ 채취한 시료의 검사는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」제38조의2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측정치를 활용할 수있다.
- 제30조(부하량의 산정 및 평가) ① 시행청은 종합이행평가를 위해 제29조의 평가와 함께 기술지침에 따라 오염 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, 오염원 조사결과를 기초로 발생·배출·삭감부하량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.
 - ② 시행청은 기준연도부터 해당연도까지 삭감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해당연도까지 완공 또는 사용 개시된 삭감시설의 삭감부하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.
 - 1. 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준공 전·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
 - 2. 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증설 전 · 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
 - 3. 처리공법 개선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공법의 개선 전·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
 - 4. 관거정비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관거정비 전·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
 - 5.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별표 10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연말 기준으로 산정
- 제31조(이행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) ① 시행청은 해당년도의 기본이행평가 또는 종합이행평가에 관한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7조의 기본계획 수립주체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해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이행평가보고서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다.
 - ③ 기본이행평가보고서와 종합이행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해양수질 및 저질(底質) 측정결과 및 시·공간적 변화 자료
 - 2. 부하량을 할당 받은 배출·삭감시설의 부하량(수질 및 유량) 모니터링 자료
 - 3.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유지관리 대장
 - 4. 총량관리대장 등 근거 자료
 - ④ 종합이행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동ㆍ리별 오염원 파악 자료
 - 2.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동·리별 오염·삭감부하량 산정 자료
- **제32조(이행평가보고서 검토)**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17조의 기본계획 수립주체를 경유하여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행청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행청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12호의 전문가협의회와 주요이해관계자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.

- 제33조(이행평가 조치계획 수립 등) 시행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1. 시행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의 재평가 후,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
 - 2. 시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·공간적 분포상황 조정
 - 3. 시행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의 재평가 후. 삭감계획의 조정
 - 4. 연차별로 할당된 자연증가 부하량의 축소 조정 및 이행방안
 - 5. 그 밖에 수질 및 저질(底質)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- **제34조(총량관리대장의 작성)** ① 시행청은 관리구역 내 오염·삭감부하량의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이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총량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.
 - 1. 제15조제3항의 지역개발부하량 관리대상에 속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시행청장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 하량을 할당받아 실시하는 개발사업
 - 2. 연면적 200㎡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·증설 및 용도변경
 - 3.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는 공공처리시설의 신설·증설·폐쇄·처리공법 개선 또는 처리경로 변경
 - 4.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· 폐쇄 · 증설 또는 처리공법의 개선
 - 5. 관리해역 내에서 수행되는 퇴적물 준설, 갯벌 정화시설의 설치·확대 또는 변경
 - ② 총량관리대장의 세부 작성요령은 별표 11과 같다.

제7장 보칙

- 제35조(기술지침의 작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제11호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나누어 정할 수 있다.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지침을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여 시·도지사 및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36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.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404호, 2018. 1. 8.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